

중국의 한국 서해 내해화 전략 분석

이은수*·신진**

- I. 서론
- II. 중국의 서해 내해화 의도와 실태 분석
- III.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 IV. 중국의 내해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 V. 결론

◀ 국문 초록 ▶

본 논문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분석하여 해양에 종사하거나, 해양 정책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서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해상활동을 아더 라이케가 제시한 전략 구성요소인 목표(Ends), 방법(Ways) 및 수단(Means)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은 서해 내해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제 요소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중국은 ① 정전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이용하여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인근에서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의도적으로 방조하여 서해를 영해로 기정사실화하며, ② 자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서해상 한·미 연합훈련을 거부하는 한편, 동해역 내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군용기를 한국방공식별구역 인근으로 상시 진입하게 하여 군사적 능력을 과시하고, ③ 과학탐구를 빙자하여 서해에 각종 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있다. 필자가 본 연구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해에서 자행되는 일부 중국의 활동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한국은 서해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 활동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미 연합전력 중심의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 중국, 서해, 내해화, 기정사실화, 파란색 국토

I. 서론

중국은 한국의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만들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내해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¹⁾(西海 內海化 戰略, China's Strategy for territorialization in Korea's West Sea)이란 중국이 서해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한국의 사용을 억제하고, 중국의 일방적 사용을 강제하는 활동이다. 중국은 서해 내해화를 위한 방법으로 한국의 관할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의 어선들을 방조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게 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단의 서해진입을 거부하면서 동 해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증가시키는 한편, 의도적으로 KADIZ²⁾(한국방공식별구역, 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를 진입하며, 과학적 탐구를 빙자하여 한국의 서해를 잠식하는 방법 등의 수단을 활용한다. 이를 통해 중국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속적으로 서해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확인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서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은 한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특히 이 문제는 한국의 미래 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나, 관련 연구사례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이 추구하고 있는 서해 내해화 전략의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아더 라이케(Arthur F. Lykke)가 제시한 전략 구성요소인 목표(Ends), 방법(Ways) 및 수단(Means)의 세 가지 기준³⁾을 활용하여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분석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경험적 사례연구에 의한 추론방법을 사용한다. 중국이 서해에서 추진하는 활동들을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귀납적으로 중국이 추진하는 전략을 추론하는 것이다. 연구 범위는 약 10년(2010-2022년)간의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반에 공개한 문서와 언론자료,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문헌 연구 및 전략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활용하였다.

1)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이라는 용어가 공식 석상에서 처음 사용된 것은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2010년 8월 6일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 주최로 한국언론재단에서 열린 '긴급 안보 현안 세미나'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동 세미나에서 홍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이 "중국은 서해 상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해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내해화하려는 패권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고, 이후 10년 넘게 각종 언론과 학술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귀원, "中 서해훈련 반대는 독점적 해상통제권 요구," 『연합뉴스』, 2010.8.6.

2) KADIZ는 2007년 7월 28일 공포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군용기운용법)』에 따라 국내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KADIZ를 진입·이탈하고자 하는 항공기는 최소 24시간 전까지 합참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2104호) 제25조., 제성호, "KADIZ 무단 진입과 법적 대응," 『서울국제법연구』, 제28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21, p. 13.

3) Arthur F. Lykke,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U.S. Army War College, 1982), pp. 179-185.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의도와 실태에 대해서 분석하여 관련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한다. 이후 3장에서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으로 어업 활동을 통한 기정사실화, 한·미 연합군사훈련단 서해진입 거부, 과학탐구를 빙자한 군사시설 확대 등 3가지 분야로 나누어 세부적인 분석을 한다. 4장에서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그리고 서해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거부 효과를 확인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II. 중국의 서해 내해화 의도와 실태 분석

중국은 후진타오가 2012년 11월 “해양강국건설”이라는 국가전략목표를 제시하면서 국가 해양 이익의 보호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했다.⁴⁾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의 시진핑은 해양 방위 능력 강화, 해양영토 주권 수호, 해양 권익 확보 및 해양 경제발전 보장이라는 네 가지 세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⁵⁾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 영토주권이란 공해를 무주지로 인식하고 먼저 점령하는 자가 소유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서해를 파란색 국토라고 인식하여 점령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일본 국제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 『인도태평양 시대의 일본 외교: 중견국 및 스윙국가에 대한 대응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Secondary Powers/Swing Statesへの対応)』에 의하면, 중국은 공해를 파란색 국토(藍色国土)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무주지인 공해를 중국의 영해로 만들기 위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처럼 주변국들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⁶⁾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은 중국이 공식적으로 공표한 전략은 아니다. 서해에서 중국 국적의 다양한 해상 전력 활동,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들을 관측했을 때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중국의 실질적인 전략이다. 중국에 이 전략은

4) 胡锦涛. “中国共产党第十八次全国代表大会上的报告,” (2012.11.27.), 김현승 외, “중국 해양안보 전략에 관한 분석 및 평가-아더 라이케의 전략분석을 중심으로,” 『Strategy 21』, 제4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5, p. 35.

5) Liza Tobin, “Underway-Beijing’s Strategy to Build China into a Maritime Great Power,” *Naval War College Review*, Vol.71, No. 2(2018), pp. 17-48; 金永明, “中国海洋安全战略研究,” 『国际展望』, 第4期 (2012), pp. 7-8; 成志杰, “中国海洋战略的概念内涵与战略设计,” 『亚太安全与海洋研究』, 第6期 (2017), pp. 31-34; 김현승 외, “중국 해양안보 전략에 관한 분석 및 평가-아더 라이케의 전략분석을 중심으로,” 『Strategy 21』, 제4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9, p. 38. 재인용.

6) 日本国際問題研究所,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 Secondary Powers/Swing Statesへの対応,” 2015.03. 平成25年度外務省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総合事業), https://www2.jiia.or.jp/pdf/resarch/H25_Indo-Pacific/H25_Japanese_Diplomacy_in_the_Indo-Pacific_Age.php (검색일: 2022.3.26.).

매우 중요하나, 대외에 알려지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중국의 전략 성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은밀히 진행되길 원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만약 중국이 서해를 대상으로 전략 A를 수립했다고 가정한다면 중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실행할 것이다. 중국이 직접 공표하지 않는 한 그 전략의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제한되나, 역으로 중국이 서해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수단을 분석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목표를 귀납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중국이 서해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해상활동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인민을 총동원하는 것으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민간인을 동원하여 점령하고, 과학 등 학문 활동을 빙자한 군사시설물을 설치하여 점령지로 사용하며,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이를 강제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표 1>과 같다.

<표 1> 중국의 서해 내해화 방법

① 민간인의 어업활동을 지속시킴으로써 서해를 중국의 영해로 사실상 지배하고, 영해로 기정사실화한다.
②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시 미군의 서해상 진입을 거부하는 한편, 중국 군함의 해상활동을 늘리고, 중국 군용기로 하여금 KADIZ를 상시적으로 진입하여 비행하게 함으로써 영해와 영공의 지배를 상례화한다.
③ 과학 탐구를 빙자하여 군사시설을 지속 확대한다.

* 출처 : 연구자 본인 직접 작성

중국의 이러한 활동(방법, 수단)을 분석하면, 중국의 의도(목표)를 파악할 수 있다. 중국의 전략을 아더 라이케가 제시한 전략 구성요소인 목표, 방법 및 수단의 세 가지 기준으로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의도와 실태

의 도 실 태	목표	전략 A → 서해 내해화(西海 內海化)		
	방법	어업 활동을 통한 기정사실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단 서해진입 거부 / KADIZ 진입 상례화	과학탐구를 빙자한 군사시설의 확대
	수단	어선, 해상민병대 ⁷⁾	해군 ⁸⁾ , 공군, 해경	정부, 연구기관

* 출처 : 연구자 본인 직접 작성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 등 도서 분쟁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전략적 소통과 무력 시위를 병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인근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그 위에 ‘불침항모’ 성격의 비행장 건설 및 경계 병력을 배치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모습이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와 센카쿠열도 인근에서 중국의 활동에 대한 대응은 많이 부각⁹⁾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하지만, 서해에서의 중국의 활동은 그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다.¹⁰⁾ 왜냐하면 중국이 서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략은 한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점진적으로 서해의 관할권을 확대해 나가는 점진적·장기적인 성격에 가깝기 때문이다.

2016년 중국은 국방개혁을 단행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을 기존 군구에서 전구 체제로 전환¹¹⁾하였다. 중국 주변국에 대해서 5대 전구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중 한반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북부전구 선양의 연합작전 지휘부이다. 전술한대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담당하는 남부전구와 동부전구의 적극적인 대응에 비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북부전구는 상대적으로 중국이 다소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여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적 충돌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한-중 관계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¹²⁾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고, 중국은 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 자체가 그리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중국보다는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면 경제적 측면에서 손해볼 것이 더 많을 것이다. 한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주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매우 다양한

7) 중국 해상민병대(Maritime Militia)는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나 조업 갈등이 발생하는 해역에서 활용하는 준(準)군사 조직이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해상민병대의 활동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며,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서해에서도 같은 형태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용원, “어선이 아니었다… 서해 위협하는 30만 중 해상민병대,” 『조선일보』, 2020.11.16.

8) 중국 해군의 시대별 서해상 활동 상황과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본 논문에서 활용한 공개 자료의 한계로 인해 제한됨을 밝힌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서해상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원준, “작년 中 합정 서해경계선 매일같이 진입… 항모전단 20차례 훈련,” 『파이낸셜뉴스』, 2021.1.27.

9) 조준형, “쿼드, 중 해상민병대·인공섬 문제 제기… 中 ‘근거없는 비난,’” 『연합뉴스』, 2022.5.25.

10) 배학영, “중국 해양세력의 서해상 활동 증가와 우리의 대응 방향,” 『국방연구』, 제63권 3호, 안보문제연구소, 2020, p. 88.

11) 방준영 외, “중·일 국방개혁 현황과 한국에의 함의,” 『전략연구』, 통권 제75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p. 94. 중국 정부는 2016년 2월,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완전히 개편하고 각 전구별 합동작전 지휘 기구를 설치하여 전구사령관 책임 하에 합동작전 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과거 군구는 책임지역 내 육군을 지휘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개편 이후 각 전구가 육·해·공·로켓군·전략지원부대를 통합지휘함으로써 연합훈련·작전을 주관하는 연합작전지휘 기구로 격상되었다.

12) 한중구, “중국, 한국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시키자,” 『연합뉴스』, 2021.3.31.

분야에 있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관계¹³⁾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즉, 한국과 중국 간 협력관계가 소원해진다면 이는 곧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중국의 핵심 해역에 해당하는 서해에 미국의 원정강습단이 배치하는 명분을 제공하게 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장기전략인 “한미동맹의 이완 또는 균열”이라는 목표에 역행한다. 또한 남부전구와 동부전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힘의 분산을 초래하기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서해를 장악해 나가는 한 편,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북한 급변사태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변화가 올 것을 대비하여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서해 내해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Ⅲ.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

1. 어업 활동을 통한 기정사실화

[그림 1] 복잡한 서해의 경계선¹⁴⁾



13) 하유미,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 무엇보다 안보,” 『이투데이』, 2022.5.18.

14) 박용한, “EEZ도 확정하지 못한 한·중, 영키고 영킨 경계선은 시한폭탄,” 『중앙일보』, 2021.1.27.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해에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 주장하는 경계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양국 간 합의된 해상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으며, 잠정조치수역이라는 이름으로 상호 중첩되어 설정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해상경계선 설정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한국과 중국 모두 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경계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에 이 문제의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뚜렷한 대책이 없기에 해결 또한 요원해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민간 어민 또는 어민으로 위장한 해상민병대를 이용하여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이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이용한 것으로 한국의 경비정이 출동하여 이를 축출하면 북한 영해로 도피했다가 한국의 경비정이 복귀하면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으로 다시 이동하여 불법조업을 일삼는 형태이다.¹⁵⁾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 조업은 남북 사이에 북방한계선이 해상경계선으로 실효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계속됐으며, 벌써 10년 이상이 훌쩍 지나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해양경찰청의 ‘불법조업 외국 어선 단속 현황’에 따르면 10년(2011~2021년)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건수는 2,300건에 달하며 영해를 침범한 사례도 200건이 넘는다.¹⁶⁾ 이렇듯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자행되는 불법조업은 거의 매년 보도되다시피 하니 한국 국민에게 이제는 이것이 마치 일상이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불법조업 중국어선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형태로 한국의 어족자원을 약탈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¹⁷⁾ 중국의 불법조업에 관한 문제는 비단 서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인근 해역의 주변국들도 큰 피해를 보고 있어 이미 국제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자국 어선들의 어업 활동을 근거로 동 해역을 자국의 영역으로 주장하는 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그 예이다. 일본 외무성 산하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지난 2020년 6월,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해 과거 1905년 독도가 일본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본인 어부들이 독도 주변에서 조업했다는 증언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다.¹⁸⁾ 영상을 통해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과거 세대의 독도에 관한

15)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형태는 주 저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근거한다. 주 저자는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발생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패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한 경험이 있으며, 불법조업 단속 주 기관인 해양경찰 소속 서해5도 특별경비단 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토론했던 바 있다.

16) 박동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매일경제』, 2022.5.5.

17) 노연상, “우리나라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 조업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 Vol.12, No.8,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1, p. 138.

18) 유영규, “일 ‘1905년 이전 조업’ 근거로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SBS뉴스』, 2020.6.26.

기억이 미래 세대에 계승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는 중국 어민들이 향후 과거 자신들은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대대로 조업을 해왔고 따라서 이 해역은 중국의 해역이라고 어처구니없이 주장한다면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부와 해경에서는 중국 측에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중국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중 잠정조치수역¹⁹⁾ 안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중국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과 함께 팀을 구성해 합동 단속²⁰⁾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합동 단속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국한되어 이뤄지기 때문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을 벗어나 앞서 전술한 서해북방한계선 일대나 한국 관할수역 내에서 중국어선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조업을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중국 정부에서 자국의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일삼는 현 상황을 완전히 방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은 중국어선들의 어업 활동을 통해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점진적, 장기적 효과에 기초한다. 중국어선들이 한국의 해역에서 불법적으로 어업 활동을 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중국 어민들과 중국 국민에게 서해는 사실상 중국의 내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국제법상 지속해서 어업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또는 영해 침범 등 불법행위 사실을 공식 문서로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는 한, 시간이 경과하면, 중국의 어업 활동이 기정사실로 되어 중국의 내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2. 한·미 연합군사훈련단의 서해 진입 거부

군사훈련은 국가가 자주권을 발휘하기 위해 실시하는 핵심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한국의 주변 해역인 서해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주권의 절대적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한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훈련의 주된 목적은 평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고,

19) 2000년 8월 3일 체결(2001년 6월 30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협정에 따르면 이 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획정할 때까지 EEZ 적용을 유보하는 수역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어선이 협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고, 단속권과 재판관할권은 양국이 자국 어선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수역이다.

20) 원승일, "이달 중 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단속," 『아주경제』, 2020.7.21.

전시 북한의 선제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전력이 공동의 연습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1953년 정전 이후 북한은 끊임없이 군사 도발을 반복해 왔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도발은 그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으며 UN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 등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²¹⁾ 따라서 한·미 연합전력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단행하는 것은 방어적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협을 느끼는 한국을 포함한 인근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생존권 보장을 위해 매우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난 수 년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위해 미국 함정이 서해상에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 공식 매체를 통해 이를 비난하고, 거부해 왔다. 특히 미국 항공모함 전단의 서해 진입에 대해서는 비난의 수준이 매우 높다. 미국 군사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항공모함 전단은 미국의 최선에 전투기와 조기경보기, 반경 1,000km 밖의 표적을 정밀타격할 수 있는 수백 발의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는 막강한 전력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막강한 전력이 상해와 청도, 대련 등 중국의 주요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서해에 진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연합군사훈련단의 서해 진입이 중국의 입장에서 그리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목적과 성격을 보았을 때 중국이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다소 억지가 있다. 실제 한국은 대북 연합훈련을 구상할 때 북한의 도발과 한국을 대상으로 한 선제공격에 대한 방어 훈련을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은 어떠한 고려도 하고 있지 않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시 해군의 서해 진입 주요 사례는 <표 3>와 같다.

<표 3> 한미 연합 군사훈련시 해군의 서해 진입 주요사례

구분	훈련명	일자	장소
1	한미 연합 해상훈련 ²²⁾ * 美 항공모함(조지 워싱턴) 등 참가	'10.11.28.	어청도, 격렬비열도 인근 해상
2	한미 연합 해안양륙 군수지원 훈련 ²³⁾ * 美 군수지원함 등 참가	'11. 3.23.	안면도 앞 해상
3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²⁴⁾ * 美 항공모함(조지 워싱턴) 등 참가	'13.10.12.	서해 전반
4	한미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 ²⁵⁾ * 美 항공모함(로널드 레이건) 등 참가	'16.10.10.	서/남해 전반

21) 권혁철,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미사일 발사 재개,” 『한겨레』, 2022.2.27.

중국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등 군사적 능력의 고도화가 중국의 국익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합리적 재판단이 필요하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고려했을 때 서해는 물론 한반도 주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유도하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더는 자행되지 않도록 압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중국은 서해상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연합군사훈련에 항의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조해야 한다. UN안보리 상임 위원국으로서 국제평화유지에 기여할 책임이 중국에게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을 설득하기 보다 중국의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굴복하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단의 서해진입을 거부하는 중국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공식적으로 중국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물론 중국은 자신들이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과 한미 양국이 이를 일부 수용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누적은 시간의 중압력에 의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서해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입증하게 된다.

실제로 미국의 항공모함이 서해로 진입하는 것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거부한 적이 있었다. 오마이뉴스에 의하면, 2010년 10월 20일에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위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이 서해로 진입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 반대하여 동해로 돌아갔다. 또한 2010년 10월 말 서해상에서 실시할 예정이었던 항모강습단 훈련도 한국 정부에서 반대하여 훈련 자체가 연기된 사례가 있다.²⁶⁾

한 편, 2021년 7월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서해에 진입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²⁷⁾ 이렇게 주변국이 수시로 서해에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응하는 것이 더욱 복잡해진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참가 규모와 기간, 수행지역이 매년 다르지만 꾸준히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해군 주도로 해상에서 이뤄지는 훈련은 매일 새롭게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태풍 등 기상요건, 주요 함정의 수리주기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특정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표 3>에서 정리하였듯이 지난 10여년 간 언론에 공개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시 해군력의 서해진입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두 가지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해상에서 이루어지는 연합군사훈련은 북한이 도발을 자행하거나,

22) 김범현, “서해 연합훈련 어떻게 진행되나,” 『연합뉴스』 2010.11.28.

23) 김용태, “한미, 서해 상에서 첫 해상군수지원 훈련 실시,” 『SBS뉴스』 2011.3.23.

24) 김민철, “핵 항모 조지워싱턴호 서해 진입… 일상적 훈련,” 『KBS뉴스』 2013.10.13.

25) 박성우, “한미, 대규모 해상훈련 실시,” 『자유아시아방송』 2016.10.10.

26) 김도균, “지난 10월 미 항모의 서해 진입 한국 정부가 막았다,” <디앤디포커스> 12월호 보도… 28일부터 서해 상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 『오마이뉴스』 2010.11.27.

27) 주형식, “‘디이지스함 서해 공해 출현’ 한미 동맹 약화 속 일본의 서해 진출 주목,” 『조선일보』, 2021.7.24.

도발 수위가 강할수록 무력시위 성격의 훈련이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둘째, 2017년 이후에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축소되었다.²⁸⁾ 이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 등을 거론하는 것에 영향을 일부 받은 것도 사실이나, 중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단 서해진입 거부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한 결과가 유효하게 작용한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해상에서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거부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의도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2020년 8월 31일 작성된 국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은 2016년에는 50여 차례, 2017년에는 70여 차례, 2018년 이후에는 140여 회에 이른다.²⁹⁾ 흥미로운 것은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출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림 2] 중·러 군용기의 KADIZ 연간 진입횟수³⁰⁾



이는 한국이 중국 군용기가 수시로 KADIZ를 진입하는 것에 무감각해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이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을 완전히 내버려 두고 있는

28) 하채림, “軍, 문정부 축소·폐지 연합훈련 정상화… 한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연합뉴스』, 2022.7.22.
 29) 김상진 외, “中 군용기 KADIZ 침입, 100회나 줄여서 공개한 文정부,” 『중앙일보』, 2020.10.8., 제성호, “KADIZ 무단 진입과 법적 대응,” p. 16.
 30) 위의 논문, p. 16.

것은 아니다. 공군이 주도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지만, 추적 및 감시 비행과 경고 방송 등에 그치고 있으며, 실력 행사는 상당히 제한적이다. 영공을 침범하지 않는 한은 무력 사용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³¹⁾ 특히, 2019년 7월 23일에는 중국 군용기 2대가 동해 상 KADIZ를 무단 진입하였으며, 이 중 러시아 군용기 1대는 한국의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해 한국이 경고사격을 하였다.³²⁾ 또한, 2022년 5월 24일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다시 동해 북쪽에서 합류하여 동해 독도 동북방의 KADIZ를 진입한 바 있다.³³⁾ 중국은 이미 서해를 넘어 러시아와 협력하여 한반도 전방에 대한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한 것으로 생각되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횟수가 누적되는 효과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효과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이것 또한 중국 정부가 기대하는 점진적, 장기적 효과에 기초한다. 중국 군용기들이 한국의 KADIZ를 수시로 진입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중국 군인들과 국민에게 한국의 KADIZ는 사실상 중국이 수시로 진입해도 문제없는 중국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국제법상 지속적으로 공중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 군용기의 KADIZ 진입 사실에 대해 무감각하게 내버려 둔다면, KADIZ 이내에서의 중국의 비행 또한 기정사실로 되어 미래에 중국의 ADIZ로 인정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것이다.

3. 과학탐구를 빙자한 군사시설 확대

2022년 4월 5일, 한국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서해상에 설치된 수상한 구조물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³⁴⁾ 논의 대상이 되었던 수상한 구조물은 서해를 순시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발견하였는데, 시각 확인 결과 중국의 석유 시추 구조물과 그 형태가 유사했다. 한국 정부에서 관련 시설에 대해 중국 정부에 공식 문의한 결과 동 구조물은 석유 시추 구조물이 아닌, 연어 양식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인력 체류용으로 확인되었다.³⁵⁾ 이 구조물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것으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한국과 중국 사이에 공동으로 설정된 해역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한중어업협정

31) 위의 논문, pp. 15-19.

32) 김남희, “중 외교부, 군용기 KADIZ 침범 후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 자유 있다”, 『조선일보』, 2019.7.23.

33) 이대욱, “러·중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전투기 출격”, 『SBS뉴스』, 2022.5.24.

34) 문준모, “한중 잠정조치수역서 ‘중국 석유시추 설비’ 발견”, 『SBS뉴스』, 2022.4.8.

35) 강국진,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은 연어양식 보조시설”, 『서울신문』, 2022.5.2.

에 따라 한국과 중국 모두 어업 행위를 제외한 구조물 설치, 지하자원 개발 등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조물의 위치는 한중어업협정을 비롯기라도 하듯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제2광구 내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다.

이 구조물의 기능이 석유 시추가 가능한 구조물인지, 중국 측의 주장대로 연어 양식시설 운영에 필요한 장비 지원과 인력 체류용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 측의 주장대로 실제 연어 양식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는 국제법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어업 행위를 제외한 구조물 설치’라는 한중어업협정 상 문장의 해석 여부에 따라 해석이 엇갈려 논쟁의 소지가 있다.

중국이 이러한 시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중국은 과거 2008년에도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석유 시추 구조물을 일방적으로 설치했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철수했던 전력이 있다. 중국이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지하자원이나 수산물 확보 등 경제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숨은 의도는 따로 있다. 서해가 중국의 ‘내해’임을 기정사실화³⁶⁾ 하려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의 일부인 것이다. 한국 정부가 논의 주체를 최초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로 격상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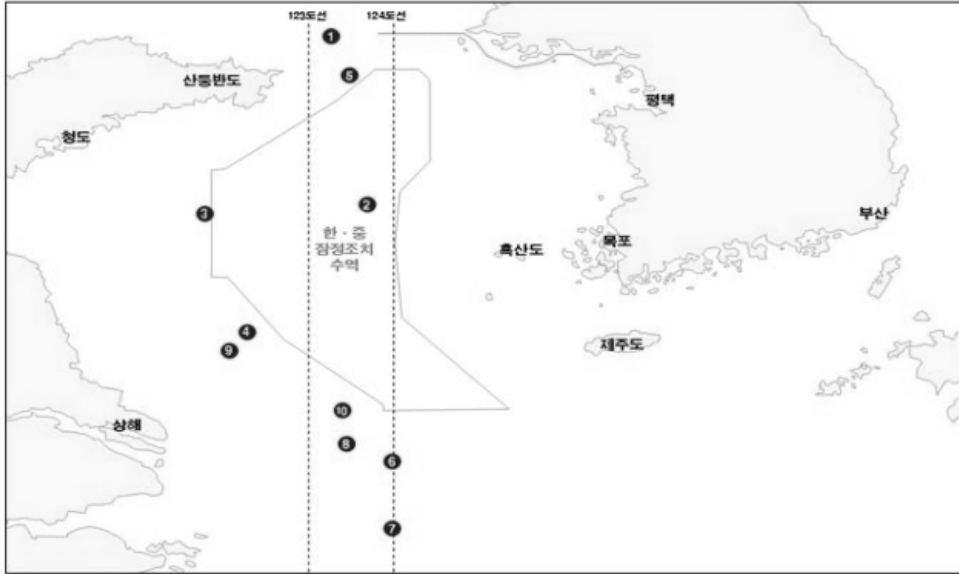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중국이 한반도 인근에 설치한 수 개의 부표이다. 과학 탐구를 위해서는 공해상에서의 활동을 국제사회가 상당한 정도까지 용인한다.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부근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수 개의 부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서해에서 중국이 설치한 부표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2014년이다. 백령도 정서 방향으로 98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중국의 부표는 동경 123도와 124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중국이 설치한 부표가 발견되기 1년 전인 2013년, 당시 한국의 해군 참모총장 최윤희 제독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해군사령원 우성리는 “대한민국 해군 함정은 절대로 서해에서 동경 124도 서쪽으로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 하고 요구를 하였다.³⁷⁾ 중국이 124도선을 한-중간 해상경계의 기준선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었다. 당시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124도선을 한국과 중국 간의 해상 경계의 기준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고,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항해를 하는 것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였다.

36) 이종윤, “노골화되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 안일함과 저 자세가 부른 참사,” 『파이낸셜 뉴스』, 2022.4.18.

37) 최윤희, “중국 ”동경 124도 서해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 『중앙일보』, 2011.7.20.

[그림 3] 중국 해양관측부표 발견 현황³⁸⁾



그 후 2018년 2월에는 서해의 정 중앙, 한-중 잠정조치수역의 한 가운데에서 중국의 2번째 부표가 발견되었는데, 이후 서해와 남해 근해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중국의 부표는 총 10개에 이른다. 폭 3m, 높이 6m에 이르고 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이는 표면에 중국어로 ‘중국해양관측부표(中國海洋觀測浮標)’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일부는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 이라고만 표시되어 있다.

부표의 설치 목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양정보 수집이다. 하지만 이 부표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이러한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한 중국의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부표가 해양 관측을 가장한 군사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 국립외교원장 윤덕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 한·미·일 수상함과 잠수함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부표를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하였다.³⁹⁾

중국이 부표를 설치했다고 해서 이후 한국과의 해상경계 협상에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표 설치의 향후 한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38) 하채림, “中, 서해 중간수역 훈련 올해만 10회 육박… 韓은 5년간 3회분,” 『연합뉴스』, 2022.10.3.
 39) 강승규 외, “중국해군의 서해 군사활동 증가 시사점 및 대응방안,” 『한국군사학논총』, 제7집 제2권, 미래군사학회, 2018, pp. 80-81.

위한 정치적·외교적 압박이자 중국의 장기 해양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부표 설치에 비례적 대응하기 위해 2018년, 한국도 직경 10m, 무게 50톤의 해상 관측용 부표를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으로 전진 배치하였다.⁴⁰⁾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이 이 부표를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쪽으로 이동 배치한 것인데, 당시 중국은 해경을 현장에 보내 마치고 복귀하는 한국 민간 선박을 추격하는 등 다소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IV. 중국의 내해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은 한국에게 매우 치명적인 위협이다.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 있어 그것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 아니며,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치명성에 비해 시급성은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전력 도입이나 자원 배분에 있어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도 그 이유에서다. 북한이 핵실험을 자행하거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실시간 속보로 전파 되지만 서해에서 한국 선박의 자유로운 항해가 방해받았다거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이 구조물 또는 부표를 설치했다는 사실은 크게 부각 되지 않는다. 유한한 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위협에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이전까지의 한국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만 주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한국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뚜렷한 방향성과 전략을 갖고 10년, 20년 뒤를 준비해야 한다. 서해는 중국에게 있어 중요한 해역이기도 하지만 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핵심적인 해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이 점진적·장기적으로 서해가 중국의 것임을 기정사실화 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과감하게 해군력을 직접 운용할 것인가? 현재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가용자원과 능력은 중국에 직접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군사, 정보, 경제, 기술, 인구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 압도적 열세라고 할 수 있다.

40) 강정규, “정부, 서해 부표 전진배치… 中 ‘부표 도발’ 맞대응,” 『YTN』, 2018.10.26.

[그림 4]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북부전구 중국군의 규모⁴¹⁾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이 수행해야 할 전략의 핵심은 ‘한·미 연합전력 중심의 비례적 대응’으로서,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기정사실화 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중국에 있어 한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은 결코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중국과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상황은 가능한 지양하고, 미국 등 전통적 우방국이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중국은 쉽게 분쟁을 확대할 수

41)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p. 112.

없거니와 불필요한 충돌을 시도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서해를 내해화하고자 하는 중국과 일전을 각오하는 자세도 물론 중요하나, 중국과의 분쟁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물론 우리가 가진 해군력 등 하드파워(Hard Power)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다른 수준의 문제이다.

[그림 4]는 서해를 주 무대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북부전구 중국군의 규모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중국의 육·해·공군과 로켓군 전력은 과거에 비해 전력의 양적, 질적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전력 증강에 맞서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할 것은 한국군의 정예화 노력과 함께 한미 연합전력을 이용한 비례적 대응이다.

한국은 중국과의 군사적 문제와 서해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비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참여하고, 서해상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하여 중국의 전략을 거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도 중국이 전력을 공격적으로 증강하면서 서쪽으로 팽창하고 있으니 미군 전력을 서해보다 안전한 동해로 또는 그 외곽으로 전투력을 계속해서 물리는 것은 대안이 아니며, 그것은 정확하게 중국이 의도하고 있는 미군의 전력 운용 방향임을 명심해야 한다. 중국이 의도하는 것은 중국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영역’으로 미군 전력의 진입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고 그곳은 현재의 서해, 가까운 미래의 동해와 남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결정적 지점으로 인식,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서해로 나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고, 해군 2함대사령부가 위치한 평택으로 미 육군 해외 주둔지 중 최대 규모인 캠프 험프리스를 설치한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 기지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전력을 증강하는 현 상황에 비례적으로 대응하여 한미 연합전력의 규모를 그것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미 연합전력은 서해에서 국제해양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해양사용, 국제 공공재인 바다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집중하고, 중국의 대규모 해상 훈련에는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비례적 수준으로 대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6월경 서해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중국 주변 해상에서 중국이 실시한 대규모 해상훈련⁴²⁾이 진행될 당시 항공모함 니미츠함과 로널드 레이건함이

42)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해군은 2020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남중국해 해역에서 052D급 미사일 구축함인 ‘후허하오터함’을 투입하여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으며, 북부전구 해군은 서해에서 054A급 미사일호위함인 ‘르자오함’을 투입, 가상의 적 잠수함을 소나로 탐지하고 공격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동부전구 해군은 동중국해에서 052D급 미사일 구축함인 ‘샤먼함’이 헬기 2대와 함께 의심선박을 추격해 나포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박수

아세안 해군들과 4일부터 남중국해에서 해상 훈련을 했던 것처럼 한국도 비례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여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실효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중국 측에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에 관한 한국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현재 서해에 수 개의 고정식 부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상황도 '비례적 대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즉, 2018년에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해상 관측용 부표 1개 설치에 머물지 않고, 해역관리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먼저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우리도 활용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중국이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설치의 기본 목적은 국제해양법에 근거한 자유롭고, 열린 평화로운 바다의 사용이 되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이러한 직접적인 방법과 함께 보다 우회적이고 근원적인 전략을 추진하여 한국의 국방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치 중심의 동맹체계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한국을 미국의 핵심적 이익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반도체 동맹에 가입하고, Quad에도 가입하며, Five Eyes Plus 등에도 가입하여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자유 세계의 가치동맹체제를 강화해야 한다.⁴³⁾

V. 결 론

중국은 2012년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진수하였고 이어 2017년 4월에 2번함인 산둥함, 2022년 6월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진수하였다. 중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35년까지 6척의 항공모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항모전단은 수 척의 원자력추진 잠수함, 구축함 등 호위전력과 함께 원해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척의 중국 항모전단이 기동하게 될 주된 작전적 공간은 어쩌면 중국이 의도한 바대로 중국의 바다로 기정사실화된 서해로 되어있을지도 모른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으로 ① 어업 활동을 통한 기정사실화, ② 한미연합 군사훈련단의 서해 진입 거부, ③ 과학탐구를 빙자한 군사시설 확

찬, "중국 서해 해상 등서 대규모 군사훈련... 미국 보란듯 공개 "美 남중국해 해상훈련에 대한 경고" 해석," 『조선일보』, 2020.7.5.

43) LOWY INSTITUTE, "When the chips are down: Biden's semiconductor war," <https://www.lowyinstitute.org/the-interpreter/when-chips-are-down-biden-s-semiconductor-war> (검색일: 2022. 5.21.).

대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어업 활동을 통한 기정사실화로 중국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지속적인 반복을 통하여 1차적으로는 중국 어민들과 중국 국민들에게 서해는 사실상 중국의 내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2차적으로는 국제법상 지속적으로 어업 활동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또는 영해 침범 등 불법행위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고 기록하지 않는 한, 시간이 경과 하면, 중국의 어업 활동이 기정사실로 되어 중국의 내해로 인정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중국은 서해 내해화 전략의 하나로 한미연합 군사훈련단의 서해 진입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군사훈련이 주권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설득하기 보다 중국의 정당하지 않은 요구에 굴복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단의 서해진입 거부를 일부 수용하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물론 중국은 자신들이 이러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과 한미 양국이 이를 일부 수용했다는 사실을 공식 문서에 기록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누적은 시간의 중압력에 의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서해가 실질적으로 중국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입증하게 된다.

셋째,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과학탐구를 병자한 군사시설의 확대이다. 통상 과학 탐구를 위해서는 공해상에서의 활동을 국제사회가 상당한 정도까지 용인하고 있다. 중국은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한반도 부근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수 개의 부표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부표의 설치 목적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양정보 수집이다. 하지만 이 부표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이러한 부표를 일방적으로 설치한 중국의 의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의 일환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 부표가 해양 관측을 가장한 군사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상의 세 가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필자는 서해상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연합전력 중심의 비례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중국이 우리의 주변 해역에서 활동하는 것에 비례적으로 대응하되, 한·미 연합전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기정사실화 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부표를 설치했듯이 우리도 서해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과 열린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의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대비하지 않은 채 다가올 비극적인 미래를 기다리고만 있어선 안 되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공격적인 대응을 주로 해왔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주변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해왔다. 대중 경제 의존도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중국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한 결과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점진적·장기적으로 서해를 내해화하고자 하는 기정사실화 전략은 한국에게 치명적이고 분명한 위기이다. 하지만 이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역으로 분명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중국의 팽창에 대응 전략을 고민하는 미국에게도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므로 충분한 전략적 가치가 있는 일이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수 일 전부터 정확하게 예측했다. 이는 위성 체계를 기반으로 한 실시간 감시와 정보 수집의 유용성을 보여준다. 모두가 하늘을 바라보며 우주 경쟁에 열을 올리는 지금, 한국은 하늘과 동시에 바다 깊은 곳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서해에서 미국이 우주 정보를, 한국이 수상과 수중 정보를 서로 공유하여 서해를 관리한다면 중국이 과연 서해를 중국의 내해로 인식할 수 있을까? 한국은 중국의 서해 내해화 전략을 직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저서

- Lykke, Arthur F.,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U.S. Army War College, 1982.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1.

2. 논문

- 강승규, 황상현, 최구식, “중국해군의 서해 군사활동 증가 시사점 및 대응방안,” 『한국군사학 논총』, 제7집 제2권, 미래군사학회, 2018.
- 김현승, 신진, “중국해양안보전략에 관한 분석 및 평가-아더 라이케의 전략분석을 중심으로,” 『Strategy 21』, 제45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9.
- 노연상, “우리나라 서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해상민병대의 불법침략 조업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미래사회』, Vol.12, No.8,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1.
- 방준영, 양정학, “중·일 국방개혁 현황과 한국에의 함의,” 『전략연구』, 통권 제75호,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 배학영, “중국 해양세력의 서해상 활동증가와 우리의 대응 방향,” 『국방연구』, 제 63권 3호, 안보문제연구소, 2020.
- 제성호, “KADIZ 무단 진입과 법적 대응,” 『서울국제법연구』, 제28권 2호, 서울국제법연구원, 2021.

3. 기타 자료

- 강국진, “中, 잠정조치수역에 연어 양식 보조시설 설치,” 『서울신문』, 2022.5.2.
- 강정규, “정부, 서해 부표 전진배치… 中 ‘부표 도발’ 맞대응,” 『YTN』, 2018.10.26.
- 권혁철,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미사일 발사 재개,” 『한겨레』, 2022.2.27.
- 김남희, “중 외교부, 군용기 KADIZ 침범 후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 자유 있다,” 『조선일보』, 2019.7.23.
- 김도균, ““지난 10월 미 항모의 서해 진입 한국 정부가 막았다,” <디앤디포커스> 12월호 보도… 28일부터 서해상에서 한미연합훈련 실시,” 『오마이뉴스』, 2010.11.27.
- 김민철, “핵 항모 조지워싱턴호 서해 진입… 일상적 훈련,” 『KBS뉴스』, 2013.10.13.
- 김범현, “서해 연합훈련 어떻게 진행되나,” 『연합뉴스』, 2010.11.28.
- 김용태, “한미, 서해 상에서 첫 해상군수지원 훈련 실시.” 『SBS뉴스』, 2011.3.23.
- 문준모, “한중 잠정조치수역서 ‘중국 석유시추 설비’발견,” 『SBS뉴스』, 2022.4.8.
- 박동환,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철퇴..尹정부, 단속본부 만든다,” 『매일경제』, 2022.5.5.
- 박성우, “한미, 대규모 해상훈련 실시,” 『자유아시아방송』, 2016.10.10.

- 박수찬, “중국 서해 해상 등서 대규모 군사훈련… 미국 보란 듯 공개,” 『조선일보』, 2020.7.5.
- 박용한, “EEZ도 확정하지 못한 한·중, 영키고 영킨 경계선은 시한폭탄,” 『중앙일보』, 2021.1.27.
- 원승일, “이달 중 해수부·해경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단속,” 『아주경제』, 2020.7.21.
- 유영규, “일 ‘1905년 이전 조업’ 근거로 “독도는 일본땅” 또 억지,” 『SBS뉴스』, 2020.6.26.
- 이귀원, “中 서해훈련 반대는 독점적 해상통제권 요구,” 『연합뉴스』, 2010.8.6.
- 이대욱, “러·중 군용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전투기 출격,” 『SBS뉴스』, 2022.5.24.
- 이원준, “작년 中 함정 서해경계선 매일같이 진입… 항모전단 20차례 훈련,” 『파이낸셜뉴스』, 2021.1.27.
- 이종윤, “노골화되는 중국의 서해 내해화 시도: 안일함과 저 자세가 부른 참사,” 『파이낸셜뉴스』, 2022.4.18.
- 조준형, “쿼드, 중 해상민병대·인공섬 문제 제기… 中 ‘근거없는 비난,’” 『연합뉴스』, 2022.5.25.
- 주형식, “‘디이지스함 서해 공해 출현’ 한미 동맹 약화 속 일본의 서해 진출 주목,” 『조선일보』, 2021.7.24.
- 최윤희, “중국 ”동경 124도 서해 넘어와 작전하지 말라,” 『중앙일보』, 2021.7.20.
- 하유미, “군사·경제동맹 이어 기술 추가한다… 무엇보다 안보,” 『이투데이』, 2022.5.18.
- 하채림, ““軍, 문정부 축소·폐지 연합훈련 정상화… 한미정상합의 후속조치,” 『연합뉴스』, 2022.7.22.
- _____, “中, 서해 중간수역 훈련 올해만 10회 육박… 韓은 5년간 3회뿐,” 『연합뉴스』, 2022.10.3.
- 한중구, “중국, 한국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시키자,” 『연합뉴스』, 2021.3.31.
- 日本国際問題研究所(<https://www2.jiia.or.jp/>), 『インド太平洋時代』の日本外交 : Secondary Powers / Swing Statesへの対応』 2015.3. 平成25年度外務省外交・安全保障調査研究事業 (검색일: 2022.3.26.).
- LOWY INSTITUTE(<https://www.lowyinstitute.org>), “When the chips are down: Biden’s semiconductor war,” 『theinterpreter』 (검색일: 2022.5.21.).

〈Abstract〉

Chinese Maritime Dispute Strategy for territorialization in Korea's West Sea

Lee, Eunsu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hin, J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ina has been pushing for a systematic strategy for territorializa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o invade Korea's West Sea (Yellow Sea) in order to create China's territorial water. China's strategy for territorializing the West Sea is an activity in which China curbs the use of South Korea and enforces the illegal use of China in order to dominate the West Sea exclusively. China aided Chinese fishing boats that engaged in illegal fishing in Korea's jurisdiction as a means to territorialize the West Sea, and is opposed to combined exercise and training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Naval Forces in the West Sea, while intentionally entering 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In addition, Beijing used 'scientific exploration and research' measures as a pretext for its strategies in order to encroach on Korea's West Sea. China is carrying out such work to announce to the world that China is a systematic and organized country while consistently attempting to dominate the West Sea. China's activities in the West Sea seriously infringe South Korea's sovereignty. In order to respond to China's strategies of territorialization in the West Sea stated above, I analyzed the rejection effect of the ROK-US combined military training in the West Sea and presented a 'proportional response strategy centered on the ROK-US combined forces'. Korea should be able to respond proportionally to China's activities in the sea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 should be able to neutralize China's attempt to a *Fait Accompli*. In addition, just as China installs buoys in the Korea-China Provisional Measures Zone, Korea should be able to install and actively utilize some devices in the West Sea and for the use of free and open West Sea. Korea should not just wait for the tragic future to come without preparing for China's gradual and long-term strategy, and Seoul needs to respond to China's maritime policy in

the West Sea with a more active attitude than it is now. China has historically taken a bold and aggressive response to neighboring countries that are consistent with a passive attitude, on the other hand, Beijing has taken a cautious approach to neighboring countries that respond with an active attitud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Korea's passive response to the Chinese strategy in the name of a 'realistic approach' such as Korea's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for economy will result in China's success for territorialization of the West Sea.

Key words : China, the West Sea, territorialization, fait accompli, blue territory